

## 1991년 12월 13일 제122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 일시: 1991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1분 개회

○ 발언자:

-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郎) 정부위원(외교관, 외무성 아시아국장, 내각관방 내각외정심의실장, 주 인도 대사, 주 중국 대사)
- 우에다 고이치로(上田耕一郎) 의원(일본공산당 소속 참의원 의원)
-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국무대신(외무관료, 정치가, 자유민주당 소속. 방위청 장관, 내각관방 장관. 자민당 정부조사회장·간사장, 후쿠오카 시장, 일본 중국우호협회 회장·명예회장)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2215261X00319911213&spkNum=68&current=27>

○ 해제(개요 및 특징)

우에다 의원은 신문에 보도된 조선 출신 종군위안부의 괴로웠던 인생 역정을 언급하면서, 개별적 소송과는 별개로 정부 차원의 보상책을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가토 관방장관은 정부 간 청구권 문제의 일괄 타결이라는 종전의 정부 입장을 반복하면서, 개별 소송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대응해 나간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함.

○ 주요 내용 번역

- ▷ **우에다** “숫자를 확정할 수는 없어도 아시아 여러 국민에게 준 피해는 거의 2천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은 현재 외무성의 설명에서도 사실로 나와 있는데, 최대의 피해는 중국으로, 중국에서 천만 명 또는 2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사망자 수로 나와 있는 셈입니다. 외무성에 묻겠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가 반세기를 거쳐 아시아 각지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신문에는 중국에서 비전투원 천만 명 살상에 대해 24조 6천억 엔이라는 배상 청구가 베이징(北京)에 있는 일본대사관에 제출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보상 요구 관련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부, 민간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 ▷ **다니노 정부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지만, 먼저 모두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은 누차 답변드렸다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그와 같은 것은 이미 많은 경우 결론이 났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상대방으로부터의 요구나 요청이 일본 외무성을 통해 일본정부에 제기되고 있는 것도 중국의 경우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언급한 중국 역사학자에 따르면, 일중전쟁으로 손실된 중국 측의 재산은 약 1천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는 별도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상 요구는 조선반도와의 관계로 인해 일본의 법정과 지방재판소에, 예를 들어 사할린 잔류한국인·조선인들의 보상 요구 관련해서 이미 제소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 사례로는 어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이른바 **종군위안부**들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 **우에다** “어제도 **종군위안부** 문제, 매우 가슴 아픈 문제를 여기서도 시미즈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조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신문에는 최근 도쿄 지방재판소(東京地裁)에 제소한 당사자 김 씨(김학순-역자)의 매우 고달팠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15세 때 매를 맞으며 납치되었고, 중국의 전전(前戰) 기지에 도착한 날부터 장교를 상대하였으며, **위안부** 5명에 병사는 약 300명, 하루에 몇십 명이나 다녀가서 정말로 지옥 같은 나날이었다고 청춘을 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10만 명에서 20만 명이라는 숫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만약 가토 관방장관이 조사하셔서 정부, 국가의 책임이 밝혀졌을 때 어떤 보상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략)

- ▷ **가토 국무대신** “지금 조약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일한 간의 조약상 청구권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군위안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그 소송 각각의 주장 등을 보아가면서, 또 사실관계를 보아가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여기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